

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볼리비아의 교육개혁과 대(對)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의 방향 성찰¹⁾

김진희

들어가며

괴테는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목적 달성과 수단적 의미의 여행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찰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언설이건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볼리비아 라파즈까지 왕복 65시간이 소요되는 여정에서 끊임없이 건강한 ‘도착’을 염원하게 만든 나라가 볼리비아이다. 국제 비교교육학을 연구하는 필자는 먼 하늘 길을 돌고 돌아서 발을 디디게 된 ‘도착’ 자체가 의미를 주는 나라, 볼리비아를 작년에 만나게 되었다. 그동안 50여개 국가를 다닌 경험을 가진 필자는 고산증으로 인한 현기증과 호흡곤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보다도 독보적인 매력, 묘한 이질성을 품은 볼리비아를 다녀오면서 인상적인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여전히 학습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본고는 필자가 2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연구물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음을 미

1) 본고는 저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교육개발원의 3차년도 연구과제(2013-2015)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 중남미 교육현황 및 교육개발협력과제’의 일부를 활용하여 보완함

리 밝힌다.

1. 볼리비아 교육의 현황과 교육개혁 이슈

볼리비아는 남미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한 내륙국가로서, 중남미 대륙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2,532 달러(구매력평가 기준 5,099 달러)로 세계은행이 분류한 하위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country)에 속한다. 우리정부가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위원회를 주축으로 對중남미 공적개발원조의 중점지원대상국가로 4개국-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빈곤 국가이다. 이러한 볼리비아에서 교육 체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최신 교육개혁 동향과 이슈는 무엇일까? 이러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한국의 對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볼리비아는 2005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에보 모랄레스)의 집권을 계기로 2009년 국민투표를 거쳐 신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l Estado Plurinacional)을 채택하여 신헌법에 따라 국정 전반의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신헌법은 원주민들의 권익향상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기에 교육 분야도 원주민 교육 및 원주민 언어/문화 보존 육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볼리비아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에게 볼리비아의 다문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inter-and intra-cultural education)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볼리비아는 과거 문해교육에 집중적인 노력을 실시한 결과 목표에 상당부분 달성을 이루었으므로, 이후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해 이후 교육(post-alphabet education)’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수학 등 실용적인 교

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볼리비아 교육의 최우선 과제는 원주민을 위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증진하는데 있다. 일례로 원주민에게 대학 교육을 제공하고 원주민 문화/언어를 보존/교육하기 위한 특수대학을 3개 설립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국가정책의 큰 변화 속에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대학 및 직업훈련교육 분야에 대한 국내외의 투자가 위축되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도 포착할 수 있었다.

교육체제 측면에서 볼 때 볼리비아의 국가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중앙 부처인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개발, 적용, 평가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허가 아래 개별적인 단위학교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교육개혁 동향: 볼리비아 교육은 지금?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원주민 인구를 보유하고, 독자적인 대외 노선을 선언한 볼리비아는 다양한 교육 개혁 이슈를 가지고 있다. 볼리비아의 교육개혁은 1994년 교육개혁법(ERL 1565)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 볼리비아의 교육은 원주민을 교육대상으로 도외시키고, 도시 엘리트 계층을 대상으로 스페인어 교육에 치중되어 있었다. 당시 Gonzalo Sánchez de Lozada 대통령 정부는 같은 해 발효한 시민참여법(Popular Participation Law)의 정신과 보조를 맞추어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 교육정책을 분권화하고, 원주민 언어(Quechua, Aymara 등)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게 하는¹⁾ 획기적인 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은 국가기획에 반영되어 빈곤감소계획의 일환으로 교육예산을 증가하였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 원주민 언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문화간 이중언어 교육사업 (Intercultural Bilingual Education: EIB)’으로 명명되었다.

볼리비아의 평균 수학연한은 1992년 4.4년에서 2001년 7.9년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에서 문화 간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 이중 언어교육을 국가 교육의 근간으로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리비아의 교육은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의 모든 부문에서 이러한 다양한 민족, 언어, 문화를 통합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교육의 확산은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기 보다는 일부 도시 거주민에게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가져오게 되었다. 2005년 집권에 성공한 모랄레스 정권은 코카 노동자 출신이자,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사회주의 정책을 근간으로 대대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가장 근자의 교육개혁으로, 2006년 9월에 제정된 볼리비아의 신교육법 “Avelino Siñani-Elizardo Pérez”을 통해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다. 신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과정조직위원회는 다양한 하부조직, 영역, 방법, 그리고 목적에 의거하여 교육시스템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총체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가치, 활동 등을 교육적으로 조직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볼리비아 중앙교육부는 교육 행정적 측면에서 초중등교육·문화 결정권 및 스포츠에 관한 권한을 지역에 이양함으로써 각 민족의 문화, 언어와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교육에서도 토착어 교육, 토착 문화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신교육법 “Avelino Siñani-Elizardo Pérez”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으로서 연령대에 맞는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교육제도를 확정하는 교육개혁을 시도하였다. 현재 볼리비아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는 4대 분야(inter-cultural, intra-cultural, productiva, comunitaria)는 다음과 같다.

〈표 1〉 신교육법의 4대 교육 정책

정책구분	내용
자문화 보존·육성(Intraculturality) 및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	• 다양한 민족 문화 재건 • 민족의 정체성, 지식, 지혜, 가치, 언어의 보존과 고양 • 상호 이해 학습(조화와 합의) • 다양한 부족어 보존 및 향상 • 부족어를 제도적 공용어로 통합하는 노력 경주
생산교육 (Productive Education)	• 원주민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원주민의 생산적 기술 습득력 고양 • 각 지역의 생산적 잠재력, 필요, 지역적 국가적 역량 제고 •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생산력 증대
공동체 교육 (Community Education)	• 자연과 인간, 우주의 총체적 연대와 공동체성 확산 •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교육 강조 •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공동체간의 유대 강화
간문화 교육과 다원성 교육 (Intercultural Education Plurality)	• 다양한 문화, 정체성, 인종간의 공존 강조 • 대화의 기술 향상 • 차이와 다름에 대한 개방성 고양

출처: 김진희, 황원규(2013)

볼리비아에는 총 36개의 종족과 33개의 토착 언어가 있으나 그 중 3개 언어가 가장 중요한 언어이다. 250만 명의 토착 언어 사용자를 가진 Aymara어, 200만 명이 사용하는 Quechua어, 180만 명의 원주민이 사용하는 Guarani어가 그것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모든 학생들에게 볼리비아의 다문화성을 이해하고 자기 내부 문화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문화·자문화 교육과정(inter- and intra-cultural education)을 운영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교육 정책은 이러한 관점을 근저에 두고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도 이러한 원칙에 발맞추어 원주민 교육 및 원주민 언어/문화 보존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민에게 대학 교육을 제공하고, 원주민 문화/언어를 보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대통령 산하의 특수 대학을 3개 설립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중 하나인, 아이마라 종족의 고등교육을 위해 설립된 대학교(Universidad Indígena Boliviana Aymara “Tupak Katari”, 이하 Tupak Katari 대학교)를 방문하여, 현재 볼리비아 교육 개혁 동향의 이

론과 실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대학은 2009년 볼리비아 원주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아이마라 종족들이 대학교육을 통해서 엘리트 인재로 양성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국립대학이다. 교육부 소관이 아닌 대통령실 소관 대학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현재 석유수입의 15%를 할애하여 3개 대학 육성에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수업료, 기숙사 및 음식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만큼 원주민 대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표2〉 아이마라 원주민을 위한 대학교 개관

설립년도	2009년
설립 목표 및 대학 이념	- 원주민 자주문화 창달: 원주민의 고유 언어, 역사, 정치를 보존하는 민족사관교육 - 생산교육의 강화: 생산교육을 통해 원주민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득증진을 할 수 있도록 실용기술 인재 양성
교수진	110명
재학생	1,200명(재학생의 남녀 성비는 49:51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
교수 학습 공용어	아이마라어
학위과정	본 대학에서 3년을 수학하면 ‘기사(Technical Superior)’ 자격을 부여하며, 2년을 더 수학하면 공학사(engineer), 또 2년을 더 수학 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출처: 김진희, 황원규(2013)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학 건립과정에서 우수한 교수진 확보가 여전히 요원하다. 현재 교수진 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15%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기사(Technical Superior)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약 60%는 학사나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최고급 엘리트 양성을 위해서는 교수의 질 확보가 관건이다. 또한 원주민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다보니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매우 낮은 편이다.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학력 강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종족주의,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오늘날 볼리비아 청소년 문화

의 역동성과 외래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를 반영하는데 갈등과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면담조사를 통해서 만난 원주민 대학의 총장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류문화, K-POP 등 외래문화에 관심이 높고 자기 문화의 가치를 경시하는 젊은 원주민 청년들은 스페인어, 영어 등 국제어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높지만, 대학에서는 오로지 민족 언어인 아이마라어만 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점 역시 제약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볼리비아의 교육 기조에서 현재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은 ‘생산교육’(productive education)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직업기술교육이다. 국가 차원에서 볼리비아는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대 기술을 습득하여 새로운 도약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지 교육부 고위 관료 역시 면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생산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대외적 자주 노선을 선언한 에보 모랄레스 정권은 그동안 유지되어온 선진 공여국가의 일방적 원조 정책을 거부하고, 직업교육 영역에 대한 중장기 투자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로 연구진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생산교육의 정책 노선과 배치될 만큼 위축되어 있는 직업기술학교를 방문하여, 현황을 분석할 수 있었다. 볼리비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라파즈 직업기술학교(Escuela Industrial Superior “Pedro Domingo Murillo”, 이하 “Pedro Domingo Murillo”)는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용의 난관을 가지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향후 볼리비아가 중위 소득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이다. 국가가 생산교육을 강조하는 선언을 발표했지만 직업기술교육 현장의 상황은 국가의 거대 담론과 달리 매우 열악했다. 따라서 개발협력적 관점에서 볼리비아의 잠재적, 직접적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과 현실의 틈새를 지원해 주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2. 볼리비아의 교육 쟁점과 개발협력의 방향

가) 볼리비아의 내향성과 자주성: 민족주의적 교육의 실현

최근 볼리비아의 가장 큰 교육적 이슈는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인 에모 모랄레스에 의해 주도되는 탈식민지 및 원주민 권한 강화 교육의 실현이다. 볼리비아 교육개혁의 시초로 일컬어지는 1994년의 교육개혁법부터 시작된 원주민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보다 과감하게 시행되고 있다. 2010년 통과된 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원주민 언어인 Quechua, Aymara 혹은 다른 원주민을 스페인어와 더불어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한다.

원주민 언어에 대한 존중은 다원적 사회로서의 볼리비아의 필수적인 존립근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배경에는 볼리비아 주민의 2/3이 원주민이지만 오랫동안 차별을 겪어왔다는 역사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적인 탈식민지화 혹은 반제국주의 정책으로 정권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정치적 수사로서 활용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볼리비아에서 다른 사회문제를 도외시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과거 1990년대 추진되었다 실패한 원주민 언어 교육의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즉, 원주민 언어 교육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는 거리가 멀어 원주민들의 사회진출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준비도 없이 시행된 원주민 언어 의무화 교육이나 학교에서 정부의 정치적 성향을 강조하는 교육 등은 오히려 미래교육에서 강조하는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과 지식 기술 습득에 필요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아울러 볼리비아가 최근까지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성인교

육에 대한 관심을 통해 기초교육기회 확대와 성인문해교육 목표를 달성했다고는 하나 학교의 교육적 기능은 제한적이다. 2부제 수업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교육은 4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은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민족주의적 교육의 문제는 교육개발협력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이다.

나) 생산성 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의 활성화

볼리비아의 새 정권 하의 원주민 교육 및 교육의 정치화에 대한 강조는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교육개혁의 흐름이 멈춘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초등교육 기회 확대 이후의 교육적 과제인 교육의 질 향상과 중등교육과정의 확대 그리고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여러 개선 노력들이 정책의 중심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특히, 에보 모랄레스 정권의 서구세계와의 관계 단절 정책은 그 동안 이루어진 선진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의 원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USAID는 볼리비아에서 사업을 철수했으며 다른 서방 국가들의 경우에서 지원사업을 축소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외부기관들에 의해 지원받아온 교육사업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양자원조에 있어서 교육분야에 대한 원조가 경제발전 및 환경변화 이슈 그리고 거버넌스의 현대화 영역 등과 같이 가장 큰 원조를 받아온 것을 고려할 때 볼리비아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제사회의 원조가 교육일반이나 초중등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왔지만 기술 지원을 통한 후기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과정에 대한 투자도 지속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다음 단계의 교육개혁 목표로서 생산교육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비록 현재 교육기조 중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직업기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산업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되던

직업기술교육의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직업훈련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높은 중도 탈락율과 낮은 취업률 그리고 낮은 교수진의 역량으로 인한 부실한 교육과정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직업기술교육 분야는 다소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 요소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교육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의 볼리비아 현지 진출과 맞물려 경제적 협력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3. 볼리비아 ‘2025 애국정책’과 교육개발협력에서의 고려 지점

볼리비아는 최근 “2025 애국정책”을 발표하면서 총 13개 주요 영역을 선정하고, 관련 정책 기조를 제시하였다.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절대 빈곤 근절
2. 기초 서비스 보편화
3. 완전한 인간 형성을 위한 보건, 교육, 스포츠
4. 과학 기술 주권 확립
5. 금융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금융 주권 확립
6. 자본주의 시장의 독재에서 벗어나 다각화·통합 발전에 의한 생산성 주권 확립
7. 국영화, 산업화, 상업화를 통한 천연자원 주권 확립
8. 식량 주권 확립
9. 천연자원 보존을 고려한 통합 개발로 환경주권 확립
10. 국가간 상호보완적 연대
11. 공공행정 투명성 확보
12. 축제, 음악, 강, 밀림, 산, 눈, 깨끗한 공기, 꿈을 향유
13. 환희, 행복, 번영, 바다의 회복

출처: 김진희, 황원규(2013) 재구성

가) 볼리비아 정책 기조의 특수성

교육개발협력은 공여국이 일방향적으로 수원국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해당 국가의 정책과 계획에 발맞추어야 하는 것이 제일의 원칙이다. 이런 맥락에서 애국정책을 비롯하여 볼리비아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은 고려해야 할 특수 지점들이 많다. 특히 교육협력 모델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교육개발협력의 살아있는 현장 맥락과 그것에서 기인하는 국가 사회적 특수성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특히 볼리비아는 그러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볼리비아 최초로 원주민 출신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모 모랄레스 정권은 국가의 자주정신과 주체사상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다수의 개발협력 전문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교육개발협력의 용어, 의식, 추진 방식, 지향점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연구진의 현장 조사에서 만난 볼리비아의 관료들은 ‘한국이 지원하겠다(Korea would support)’라는 표현보다는 ‘한국이 협력하겠다(Korea would cooperate)’라는 표현을 선호하였고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수혜자의 위치가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관점이 선명했다.

나) 볼리비아의 문화·제도적 환경에 대한 고려

볼리비아의 다문화적 사회구조 및 식민유산은 이 나라의 문화 및 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볼리비아는 남미 전체에서 원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다가 원주민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원주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고조되어 민족적 자긍심과 대외의존을 거부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2013년 오랫동안 볼리비아를 지원해 왔

던 미국 원조기관을 추방하였고, 덴마크의 시민사회단체도 철수하는 등 일련의 긴장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진의 수행한 면담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은 한국의 봉사단 파견에 대해 동일규모의 볼리비아 봉사단을 한국에서도 수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수원국이 아닌 대등한 협력국으로서 당당한 자세로 외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볼리비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제도와 조직문화도 외국 원조에 대해 매우 경색되어 있는 분위기이다. 여기에 덧붙여 정부 일각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감안할 때 볼리비아에 대한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의 자존심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 스스로 지원 분야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한국의 對볼리비아 공적개발원조(ODA)는 볼리비아에서 현재 전개되는 있는 정치적, 인종적 민감성을 자극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개발협력의 대상 지역 및 민족·인종 선정에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볼리비아 맥락에 부합하는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성

향후 볼리비아는 국가적 노력을 결집하여 중진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및 기술산업개발 정책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한국의 발전 경험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국과의 상생적 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거시적인 국가 동향에 대한 구조적 맥락이 인지될 필요가 있으며, 그 속에서 교육 분야 협력 아이템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과 볼리비아의 교육개발협력은 볼리비아의 교육관련 기관 및 교육전문가들이 요청하고 있는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원조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볼리비아에 대한 한국 개발협력 인력의 현지 문화 이해가 필요하고, 현지 공용어인 스페인어 구

사력에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문학적 교육 분야보다는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적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볼리비아 교육정책의 주요 모토인 ‘생산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비교우위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개발협력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다.

- 원주민 언어 교육 및 다문화·간문화교육 인프라 지원
- 초중등학교 도서관 및 전산시설 지원
- 대학 ICT학과 시설 및 교육지원
- 교원의 교육정보화 연수 지원
- 수학, 과학 분야 교사 훈련 및 교수법 연수
- 산업기술훈련소 교과과정 개발 및 연수
- 원주민대학교 시설지원 및 교수요원에 대한 초청연수

이상을 종합하자면, 현재 볼리비아는 신정권 등장 이후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의 일환으로 원주민의 역량 강화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으며, 볼리비아 민족의 정체성과 공동체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 개인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생산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볼리비아 교육 개혁은 교육자들의 영구적 숙제인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볼리비아는 개발협력에서도 독특한 맥락을 가진 중남미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민족적, 자주적, 독립적 노선을 선언한 볼리비아와의 교육개발협력을 위해서 한국은 볼리비아를 대등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여 한다. 정중한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주체 의식과 자주성이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할 것이다. 즉 교육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의 정치적 상황과 정

책 결정과정을 중시하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날 볼리비아는 개방화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국제교류·협력’과 ‘볼리비아 공동체 고유의 문화 보전’이라는 두개의 기둥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를 주목하면서 개발협력의 전 과정에서 볼리비아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업 계획을 디자인하고, 그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모니터링하면서 궁극적으로 최고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2013년 7월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필자는 부통령실, 교육부, 외교부 그리고 국제기구 등 상위 레벨의 행정조직의 대표자를 만나서 포커스그룹 면담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나 오늘날 볼리비아의 교육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물론 출장에 앞서 국제기구 및 해외 공여기구가 제공하는 볼리비아 관련 각종 문헌과 다양한 자료들을 최대한 조사·분석한 상태였으나, 현장 조사 분석을 통해서 수십 개의 훌륭한 문헌보다 현장에서 역동하는 다층적인 맥락과 현지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문헌의 행간을 넘어서,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정책 관료, 전문가, 교육자, 현장 실무자, 시민단체와의 생생한 심층면담을 통해서 볼리비아만의 목소리와 요구를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화와 국제협력 활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긴장감을 가져야 했고,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외현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필요한 나라였다. 그래서였을까. 짧은 조사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국 여정이 필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 볼리비아에 대한 얕은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 교육개발협력 분야의 새

로운 학습을 필요로 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참고문헌

- 윤종혁 외(2013),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연구: 중남미 교육현황 및 교육개발협력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진희, 황원규(2013),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자료집: 볼리비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진희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본부 연구위원